

금속 3조직 통합의 의미와 올바른 방향

단병호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바야흐로 산별노조 시대의 서막이 열리는가. 금속연맹과 자동차연맹, 그리고 현충련으로 분립해 있던 금속 3조직의 통합작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3개 조직의 통합은 새로운 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는 청신호로서 조직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예고하고 있다. 월간 『노동사회』는 통합논의가 갖는 무게와 파급력을 감안하여 세 조직 지도부와 그에 소속된 3개 단위노조의 대표자 6인에게 통합에 관한 의견을 피력해줄 것을 의뢰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불가피한 현안이 겹쳐 이번 호에서는 금속연맹 단병호 위원장의 글과 자동차연맹과 현충련에 소속된 2개 단위노조의 글만을 실게 되었다. 이 점 독자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구하여, 이번에 실지 못한 글들을 9월호에 빠짐없이 게재토록 하겠다는 필자들의 약속을 전해드린다. 독자 여러분께 기획내용을 소개함으로써 9월호에 게재될 내용을 미리 알려드린다. — 편집자

금속 3조직, 통합으로 가는 길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 단병호 위원장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연맹 조준호 위원장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회 정갑득 의장

대우조선노동조합 니양주 위원장
 만도기계노동조합 김성한 위원장
 현대정공노동조합 손봉현 위원장

• 자료 : 남아공 금속노조(NUMSA)의 통합과정

1. 금속 3조직은 98년 2월까지 통합한다.
2. 통합을 위한 대의원대회의 대의원은 조합원 100명당 1인으로 구성하고, 조직간 통합정신에 따라 1차로 각 조직 조합원 전체규모로 배정하고 3조직은 단위노조의 규에 따라 대의원 중에서 피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통합조직의 운영체계는 지역(본부)조직과 업종분과로 하고 집행체계는 지역(본부)으로 하며, 업종분과의 활성화 를 위해 지역(본부)조직에도 업종분과를 두되 꼭 필요치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통합조직의 지도부는 각 조직간 합의를 원칙으로 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통합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5. 3조직은 1997년 9월까지 책임있는 단위(대의원대회)에서 이와 같은 통합내용을 결의하고 바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 가. 통합추진위는 각 조직에서 3인씩 9인으로 구성한다.
 - 나. 통합추진위는 ①통합을 위한 대중사업 ②통합조직의 규약 ③98년 사업 등 통합대의원대회 준비사업을 주임 무로 한다.

1. 금속 3조직 통합의 필요성

이상은 금속산업노동조합의 통합을 위해 금속 3조직 대표들이 합의 발표한 내용이다. 3조직의 통합 합의는 금속산업노동조합의 발전전망을 밝게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현단계 노동운동이 시급히 준비해야 할 과제는 급속도로 변화되는 정치·경제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역량과 조직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세계는 신보수주의·자유주의라는 사조에 의한 주도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고, 다국적 자본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자본의 세계화는 세계시장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경제지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따른 사회복지제도의 후퇴, 실업의 확대, 임금저하, 노동강도 강화 등 전반적인 노동조건이 저하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의 경제적 상황도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과학과 경제의 발전은 자본간의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고 산업의 구조조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기아그물 부도사태의 본질도 여기에 있다. 저임금을 찾아 헤메는 자본의 제3국가 이전으로 인한 고용불안도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악된 노동법도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질서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변화는 민주노조운동의 위기적 상황을 강제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노동조합운동의 주변적 환경 변화는 임금, 노동시간, 고용문제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대응방식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와 총자본이 주도하고 있는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는 노동의 유연적 이용을 위한 노동정책은 이제 개별기업단위 노동조합의 힘만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총자본에 대한 사회적 교섭력을 가질 때 해결이 가능한 문제로서 산별노조 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당면과제가 되었다.

2. 금속 3조직 통합의 의미

산별노조 건설은 단순히 기업별노조를 해체하고 조직의 단일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산별노조는 실질적인 사회적 교섭력을 가질수 있는 조직의 규모에 의한 힘과 정책역량을 가질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최소한 조합원 10만명 이상의 규모는 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기업별노조체계와 왜소한 규모의 연맹 조직력으로 정부와 자본의 노동통제정책을 이겨나갈 수 없다. 3조직 통합은 산별노조 건설의 조직적 토대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산별노조 건설은 조직간의 공동사업과 공동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조직의 분립은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투쟁 등 다양한 진술을 운영하여 금속산업 노동자의 연대와 동질성을 강화하는데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내 금속산업 노동자들이 상급조직이 다름으로 인해 실질적인 연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해서 임단투를 비롯한 지역활동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고 따라서 조합원들은 3조직의 통합을 원하고 있다. 3조직 통합은 이러한 조합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다.

금속 3조직 통합은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로 금속노동자의 조직율을 높일 수 있다. 현재와 같은 낮은 조직율로는 노동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통한 조직 확대는 이후 노동조합운동의 전망과 관련해

관건적이다. 3조직의 분립은 각 조직의 조직확대사업이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보다 기존의 조직노동자를 대상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각 조직간에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매우 소모적인 경쟁으로 각조직의 정체를 날게 될 것이다. 3조직 통합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1국 1노총, 1산업 1노조의 명제는 민주노총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조직적 과제이다. 단순한 수평적 결합이 아니라 화합적 통합을 이루어 민주적인 조직으로 단일화되어야 한다. 양노총의 통합에는 금속조직이 중심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3조직 통합은 한국노총 산하의 금속노련에 대한 강한 전인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양노총의 통합을 강제하게 될 것이다.

3. 통합의 원칙

가. 통일성의 강화

그동안 3조직은 각자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사업하며 발전해 왔다. 사업방식과 방향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단기간에 극복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조직의 출범이 상호 이해와 존중의 바탕위에서 최대한 조직적 결합력을 모으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나. 민주적 방식에 의한 통합

통합조직의 주체는 조합원 대중이 되어

야 한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 조합원의 참여를 최대한 높이고 다수의 의견이 여과없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조합원의 직접 참여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 수는 있으나 통합조직의 가맹단위가 기업별 노조라는 점, 아직 총회를 통한 일사불란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대의제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해도 통합대의원대회는 모든 단위노조에서 참여할 수 있고 가능한 현장대의원 수준에서는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대중적 사업을 통한 통합

3조직 통합이 자칫 상층 중심의 기계적 통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직 각 조직의 주요 간부들조차도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정이 아니라는데 대중적 연대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통합조직이 제대로 사업을 해나가기 위해 3조직 간부를 대상으로 정책토론회, 합동수련회 등을 조직하고 대중강연회, 공동문화행사, 공동체육대회, 노게투·사게투에 대한 공동사업 등을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통합조직이 소위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팀워크 조성 이루어져야 한다.

라. 사무처 동지들의 활동승계 보장

현재 3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사무처(중앙사무처와 지부사무처 포함) 동지들은 60여명을 뒀돌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통합조직이 부담없이 수용하기에 적지 않은 숫

자임은 틀림 없다. 그러나 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3조직의 발전과 나아가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헌신적인 노력을 받쳐왔고, 앞으로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다. 결정적인 문제가 없는 한 전원채용의 원칙하에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다만 혹여 있을지도 모르는 앞으로의 채용을 제한하기 위해 통합추진위가 구성된 이후의 채용자는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

4. 통합조직의 운영방안

가. 기관과 회의 구성

1) 통합조직의 기본구성단위는 가맹 단위노조가 되어야 한다. 통합조직이 분명하게 산별노조를 지향하고 산별노조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만 현재의 기업별노조 체제라는 객관적인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통합조직의 의사결정·집행에 있어서 단위노조가 가장 힘있게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2) 통합조직의 기관은 총회,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 등을 기본기관으로 하고 아래로 부대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고 대중의 의사가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대의원 구성은 단위노조에 직접 배정하며 회의진행의 어려움이 있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폭을 확대하고, 규모가 적은 노조도 가능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원칙하에 민주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

박하후식의 배정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4) 중앙위원회는 지역별 조합원의 구성비에 따라 2,000명당 1인으로 하고 지역본부에서 추천하되 대의원대회에서 선출 혹은 추천받는 것으로 하여 임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5) 중앙집행위원회는 임원을 포함한 상근실국장, 지역본부장, 업종분과장 등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조직체계

1) 조직체계는 지역본부와 업종분과를 두고 각 부분의 역할을 엄격히 구분하되 상호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지역본부는 광역단위로 재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원의 분포와 사업영역상의 용이성 등을 감안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통합재편할 필요도 있다. 본부 산하에 지부내지는 지구체계를 두어 현장과의 결합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본부산하에 업종분과를 둔다.

3) 통합조직의 일상적인 사업집행체계는 지역본부로 하고 지역본부는 이를 수행하는 일상단위가 되어야 한다.

4) 업종분과는 자동차(완성차와 부품업체를 분리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조선, 일반금속 등 3-4개 분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5) 업종분과의 역할은 업종의 특수성에 따른 사업으로 한정하되 업종내의 임금조건, 작업조건 등 노동조건의 평균화와 업종의 동질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활성화

하도록 한다.

다. 임원의 선출

통합조직의 임원은 사업의 일상분란한 집행을 위해 위원장, 사무처장은 런닝메트로 선출하고 여타의 임원은 후보등록 후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되 종다수의 순으로 결정하여 대중적 기반위에서 지도력을 구축하는 방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지도부 구성은 최대한 내부적 통합력을 높여야 하고 규약부제 등 준비정도를 고려해 합의에 의한 대의원대회선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다. 의무금

통합조직의 의무금은 원활한 사업을 위해 가능한 의무금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조직이 산별노조 건설을 제일의 조직적 과제로 인식한다면 그에 따른 다양한 사업과 정책개발 등 상당한 재정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현재 각 조직마다 의무금 비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해도 최소한 민주노총 의무금을 제외한 순수 연맹 의무금이 1,000원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할 것이다.

금속 3조직 통합은 이제 기정사실화 되었다. 이것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대중의 요구이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얼마나 힘 있는 통합조직을 만들 것인가가 남아있다. 모두의 슬기와 지혜를 모아 명실상부한 금속노동자의 조직구심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